

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경선 살펴보니

# 현역 국회의원 영향력 ‘글썸’... 조직력, 승부 갈랐다

### 서구갑·북구갑·북구을·동남갑 등 측근 인사 잇단 고배 당원 100% 경선 변수 작용...총선서 정치지형 변화 예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예상치 못한 반란. 권리당원 중심의 조직력이 경쟁력을 보이며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지역 평가에 따르면 광주 광역의원 1차 경선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 지원하

는 이른바 측근 인사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경선의 포인트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대리전 양상에 관심이 쏠렸다. 서구갑과 북구갑이 대표적이다. 서구갑의 1·2선거구에서는 강수훈·오미석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했는데, 이들 모두 송갑석 전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북구갑에 속하는 1·2·3선거구에서는 안평환·김건안·이숙희 후보 등 모두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오섭 전 국회의원의 측 인사들이 당선됐다. 즉, 현역 의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로, 지역 평가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정치 지형 변화가 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남갑 1·2·3선거구에서는 강원호·노소영·박상길 후보가 선출되면서 김병내 남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반(反) 현역’ 인사들이 경선 승리를 거뒀다. 북구을에서는 4선거구 조석호, 5선거구

주순일 후보가 오랜 지역 활동과 탄탄한 조직을 기반으로 당선됐다. 이들 모두 현역 국회의원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로, 2년 뒤 열릴 총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류된다. 광산구 1·2·3선거구는 박군택 의원이 선거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지지 선언한 3명의 후보가 모두 공천받았다. 이처럼 각 선거구에서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하면서 기존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체계가 상대적으로 무너졌다

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당내 공천 과정에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기초가 깔린 데다 권리당원 100% 방식의 투표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가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가로막고, 장기간 공을 들여 구축한 조직력이 경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역 평가에서는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광역의원들은 지역 조직의 핵심 축인 이들의 영향력이 2년 뒤 총선 구도에 직간접적

으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이 2년간 조직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현직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총선과 광역의원 2차 경선에서 지역 내 정치 지형 변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대선거구 4곳을 대상으로 한 2차 경선(패자부활전)과 함께 경선 통과자의 기호를 부여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태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형배 “통합특별시, 균형 성장 선도 모델 만들 터”

더불어민주당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41일 앞둔 23일 여의도 국회에 모여 승리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각자 도생에 나선 것과 달리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지방 권력 심판론을 앞세워 공동으로 선거 전선 구축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태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 뒤)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

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 누구나 잘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정책 혜택은 더 빠르고, 더 넓게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며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최정세워”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잡아야 한다)”며 “항상 국민과 함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후보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의 불록을 채워 넣어 한반도 지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완성된 지도에는 지선 슬로건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새겨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묶인 ‘전남광주’ 조각을 지도의 심장에 단단히 붙인 후 “통합이 미래다! 통합이 성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을 힘껏 외쳤다.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거대한 벽을 깨고, 지역의 생존을 넘어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그는 “100원 전기,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처럼 우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이 오고, 청년의 활기로 떠들썩한 전남광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윤석열 지방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역대 최대치의 승리 기록을 쓰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2018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이겼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최근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감지되면서 긴장도가 다소 올라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윤병태, 청년기업·농업인 정책간담회

### 분야별 현장 목소리 경청...정책 건의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빛가람동 공유오피스에서 나주 청년기업협회, 나주청년공예인협회, 나주시 4-H연합회 소속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청년 창업과 정착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나주청년기업협회(회장 이미미) 초청을 통해 마련된 자리로, 민선 9기 공약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 농업 분야는 공유주택 등 정착형 주거 지원과 농지은행 연계 통한 농지 우선 배정, 심리케어 프로그램 운영, 세무·유동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이 건의됐다. 윤병태 예비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나주시에서 추후 중년 청년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제안된 과제는 민선 9기 공약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창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성장과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청년이 나주에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제조·유통·서비스 관련 청년 기업 분야와 문화예술 관련 청년 공예인 분야, 청년 농업인 분야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청년기업 분야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상으로 임대료·운영비·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착 패키지 지원사업’ 도입과 공공사업 발주 시 청년기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공급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성과 기반의 청년기업 인증제와 금융 연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센티브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선 공모사업 기회와 작가-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공공 문화사업 내 청년 작가 참여 비율 확대, 유희공간을 활용한 전시·창작 거점 조성, 문화기획자(PM) 보상체계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불법 점유, 후보 사퇴해야” vs “토지보상 후 사용”

### 곡성군수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 공방

박용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군수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래(곡성군수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와 관련된 법 위반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3년 본인 소유 주택 등을 곡성군에 매각한 뒤 임대 계약이나 대부료 납부 없이 약 2년간 무상 거주했다”며 “군수 재임 기간에도 약 10개월간 무상 사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협의 계약서에 철거·이전 기간 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사실상 특혜”라며 법 위반 및 배임·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군수로 취임하기 전부터 불법 점유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여러 확인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실정법까지 위반하며 무상거주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만약 묵시적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은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특혜나 위법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 측은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체결 이후 잔여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돼 2025년 8월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며 “2024년 9월 협의경위서를 통해 대체주택 공사 완료 후 이후 계획을 밝히고, 실제 주택 준공 이후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점유나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며 “관련 보상 협의와 계약은 군수 취임 이전에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이후 보상금 지급과 이주는 기존 계약의 단순 이행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를 흔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박 후보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촉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공공혁신특별시’ 구축...6대 공공정책 발표 “일당독점 구조 깨는 30% 득표 혁명”

진보당 이종욱 통합시장 후보는 “6대 공공정책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공공혁신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은 민주노동당을 이은 진보정당으로, 농민수당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제도로 만든 정당”이라며 “6대 공공정책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공공혁신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대 정책은 △공공은행 설립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공 돌봄서비스공단 신설 △공공 전력판매공사 설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운영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등이다. 우선 공공은행은 광주·전남 지방정부

와 교육청 예산 등 연간 약 52조1000억원 규모 재원을 예치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대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건립 전까지는 민간시설 이용 비용도 지역 평균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돌봄 분야에서는 공공 돌봄서비스공단을 신설해 돌봄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전생애 무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구별 공공 요양병원 설립을 통해 ‘간병비 0원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공공 전력판매공사는 특별시의 재정에 육전 광주시당위원회가 후보 신청을 철회하면서 단수 추천된 것이다. 이 후보는 “30% 득표는 독점을 깨는 균형이고 경쟁을 만드는 출발이다”며 “시

국힘 이정현 통합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로 공천을 받은 이정현 후보는 23일 ‘광주·전남 30년 독점 구조를 바꿔보려는 엄중한 주문으로 받아들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는 쉬운 곳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저를 당선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30% 선거혁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남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공천을 신청했던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후보 신청을 철회하면서 단수 추천된 것이다. 이 후보는 “30% 득표는 독점을 깨는 균형이고 경쟁을 만드는 출발이다”며 “시

·도민 10명 중 3명만 결단해 주면 그분들을 의인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광주·전남 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과 구조개혁, 청년이 주도하는 통합도시 건설,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등 3대 핵심 공약도 내놨다. 또 통합시정은 광주에 두고 전남은 산업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의 선남권 관료공관 재설계를 통해 물류·노선·정비(MRO) 기능을 갖춘 서남권 관료공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남 의대 문제는 공공의대 중심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